

# 여름충남

##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홍동)  
TEL. 041. 840. 1114 FAX. 041. 840. 1129 <http://www.cni.re.kr>

여름충남

2021 SUMMER Vol. 93

충남연구원 「여름충남」 2021년 통권 93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 [ISSN] 1226-637X 비매품

## Vol.93

2021 SUMMER

### 권두언

충남혁신도시, 지역발전의 화수분이 되길

### 특집

충남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정책, 요구와 제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시사점

충남혁신도시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 현안연구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 연령과 지원금액 검토 연구

일본 방사능오염 및 오염수 해양 방류 실태

# 여름충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열린충남

## contents

2021 SUMMER Vol.93

### #권두언

04 충남혁신도시, 지역발전의 화수분이 되길

### #특집

09 ① 충남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정책, 요구와 제언  
②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시사점  
③ 충남혁신도시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 #현안연구

24 ①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 연령과 지원금액 검토 연구  
② 일본 방사능오염 및 오염수 해양 방류 실태

### #열린이슈

37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선언서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 #오피니언

41 ① 야생야사(野生野死)에 죽고 사는 사람들  
팀 대폭 개편한 한화 이글스에 기대 걸고 있다  
② 충남에 살면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기

### #해외리포트

47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중국

### #인권 A to Z

51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 #연구원 소식

55 ① 충남연구원, 올해 전략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 가져  
② 충남연구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 심포지엄' 개최  
③ 충남연구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서산의료원이 주관하는 도내 공공기관 교육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충남의 풍경

59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발행월 2021년 6월 발행인 윤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이인희 편집위원 권미정, 김진영, 박운성, 여형범, 윤정미 에디터 윤승구, 정봉희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편집·제작 승일미디어그룹(주)

문의사항은 plebs9@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09 특집1  
충남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정책,  
요구와 제언



18 특집3  
충남혁신도시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29 현안연구2  
일본 방사능오염 및  
오염수 해양 방류 실태



47 해외리포트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중국



55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올해 전략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 가져 등



권두언 &gt;&gt;&gt;

## 충남혁신도시, 지역발전의 화수분이 되길

이민원 | 광주대학교 교수



### 균형발전에 필요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충남혁신도시

서울은 조선 건국 이후 600년이 넘는 동안 세금을 응단폭격하듯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도시다. 세금에는 지방민의 돈도 있으니 지방민의 돈이 서울을 집중 육성하는 데 쓰인 것이다. 물론 지방에도 돈은 갔으나 그 돈으로 만들어낸 국토의 뼈대는 서울로의 집중만을 목표로 했을 뿐이었다. 지방민들은 살기 좋은 서울로 대이동을 단행했고, 국가는 비어가는 지방의 비극을 외면했다. 지방도 온전한 국토로 만들어야 하지 아니한가?

서울로의 집중을 초래하는 국가의 투자 방식은 중앙집권 구조와 결합하여 지방의 영역을 국토에서 축출하고 대한민국을 공간적으로 기형이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 참여정부는 마침내 국토 대개조의 삼을 땀다. 수도권의 정부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진척을 보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핵심기구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행정수도의 완성은 아직 요원하다.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그간 수차례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이러다가는 참여정부가 기획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는 죽어가는 지방의 링거 주사에 그치고 말까 두렵다. 현 정부의 국토 대개조 수술이 절실하다.

다행히 지난해 10월에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졌다. 충남을 비롯한 지방민에게 크나큰 다행이다. 추가 혁신도시의 지정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 미흡한 혁신도시, 시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만능이 아닌 혁신도시

여기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의 혁신도시는 균형발전을 추동하기에 역부족이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기관이 충분하지 않다. 지방에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 중 112개만을 10개 혁신도시에 배치하였다. 이 규모로 도시를 만들 수는 없다. 클러스터 구축에 필수적인 연구기관, 기업, 대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존재하지도 않은 기관을 연결하여 클러스터를 만들란 말인가. 산업기능이 부족한 공공기관만으로 혁신을 선도하기란 역부족이다.

이런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양적 규모를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전의 법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있어서 그렇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이미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는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존재 그 자체가 지역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혁신都市는 내부에서 역량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성과를 전파해야 한다.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혁신都市는 하나의 신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충남혁신都市도 그 존재만으로 충남의 발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충남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나 충남혁신都市 건설 너머의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세 가지다. 1) 혁신都市가 전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인가. 2)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당길 방안은 무엇인가? 3) 충남혁신都市가 충남 발전을 선도할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혁신都市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都市의 내부는 채우고 외부는 확장해야 한다. 필자의 추산으로는 수도권에는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의 출자 혹은 투자로 설립된 기업 279개가 있다. 이들을 이전하여 혁신都市의 내부를 채워야 한다. 혁신都市는 외부로 그 결실이 확산되어야 한다. 먼저 혁신都市 인근과 연계하여 혁신 지역을 만들고, 광역 내 다른 산업지구와 연계하여 혁신경제벨트를 구성하고, 혁신경제벨트를 잇는 혁신권역을 탄생시켜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려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설득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이전과 잔류의 기준도 마련하고,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전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모든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정부의 확정된 정책 발표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충남혁신都市가 충남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적합한 혁신都市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혁신都市의 공공기관이 지역에 적합해야 한다. 혁신都市 건설 목적은 지

역을 특색 있게 선도하기 위함이지 지방세 증대나 도시규모 키우기가 아니다. 그러니 무작정 덩치만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미 형성된 지역의 주력 분야를 강화하고 미래에 유망할 분야의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과 국가에 대한 사명 수행의 전제조건이다.

### 지역과 국가발전을 향한 충남혁신都市의 사명

균형발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균형발전을 이루면 전 국토가 골고루 활용되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균형발전의 사명은 지역을 활용한 국가생산성 증대다. 따라서 충남에 혁신都市를 유치하려는 갈망도 당연히 국가의 생산성 증대를 향해야 한다. 국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결핍된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 육성하여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충남혁신都市는 기존 혁신都市의 질서에 편입되어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 혁신都市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 새로운 혁신都市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채된 기존 혁신都市에 자극을 주어 깨어나게 하고, 새로운 자원이 혁신都市로 흘러들어가게 해주어야 한다. 혁신都市를 정체시킨 요인을 찾아내 새로운 방법의 혁신都市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기폭제 역할로 혁신都市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

충남혁신都市에는 국가와 다른 혁신都市에 대한 사명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이 있다. 지역에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하니 관련 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산업 구축의 선봉에 서야 한다. 이제는 지역에 인재가 없으면 기업이 오지 않는 시대이니 공공기관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내야 한다. 기존 경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민에게 다양한 가치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 설립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부는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충남 도청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이상에서 언급한 혁신都市의 사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역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역은 공공기관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공공기관을 도울 생각만 하라. 공공기관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각종 기관, 시설 그리고 예산을 재구성하라. 공공기관의 최적 활용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라.

충남혁신都市는 국가와 다른 혁신都市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충남의 지역사회는 혁신都市를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지역발전을 염원하고 행동하여 충남혁신都市가 국가와 충남 발전의 화수분으로서 자랑스러운 그 날이 오기를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



특집

- 01 충남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정책, 요구와 제언
- 02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시사점
- 03 충남혁신도시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특집

01

충남에서 바라본 혁신도시정책,  
요구와 제언

고영구 | 극동대학교 교수

혁신도시,  
여전히 중요한  
국가균형발전정책

2020년 12월 기준,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53개 기관이며, 지역인재 채용률은 28.6%이다. 혁신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수는 22만 명이며, 입주 기업체 수는 1,663개 업체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존2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존2는 그동안의 도시조성에서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사업인데, 2022년까지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별로 정해진 특화발전 방향에 맞추어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대·내외적 경기침체와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혁신도시정책도 추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추가로 진행되는 등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내포신도시에서  
혁신도시로,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 구역 지정으로 시작되어, 홍성군 200만 평, 예산군 100만 평을 포함하여 300만 평 규모로, 지금 2만 8천 명의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충남도청을 비롯한 도의회와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도단위 사회단체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7.1%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와 지역민의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충남도가 그리고 있는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다.

서산·당진·아산·천안	서천·보령·태안	홍성·예산 (혁신도시 중심)	공주·부여·청양	논산·계룡·금산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벨트	수소산업 국가혁신 클러스터	K-바이오 소재 산업벨트	국방지원 및 지역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

<5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혁신도시 지정 기념 비전 선포식〉

충남도는 혁신도시를 서해안 해양환경관리 거점은 물론,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 허브 구축, 문화 및 체육 산업의 거점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을 들여다보면, 인구의 60%, 지역내총생산의 80%가량이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이 큼에 따라 혁신도시를 환황해권의 배후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낙후된 서남부권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중심으로 구축하는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요구:  
채우자, 연결하자,  
잘 관리하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충남도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만큼 이것저것 채워야 할 것도 많다.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1) 환경·연구개발 거점 및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을 위한 환경기술 기능군, 2) 환황해권 주력산업 연구·개발(R&D) 허브 조성을 위한 R&D 기능군, 3)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 기능군 등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이 밖에 고등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대 내포캠퍼스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7 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와 병행하여 대한체육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내포혁신도시가 서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년 초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내포혁신도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거환경 만족도는 57.2%로 나타났으나,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30.2%에 그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마침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공청회에서 ‘내포 태안선’과 ‘중부권 동서 횡단선’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함에 따라 삼교역사 신설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국가철도망 모두 혁신도시 인근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 간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삼교역〉

혁신도시정책 제언:  
정책사업 수정,  
공공기관 이전, 철도 연결

도시기반 관리체계 일원화

단일생활권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공공시설 관리가 홍성과 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 민원이 적지 않다. 실제 쓰레기를 공동 집하 처리하는 자동집하시설 관리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교통신호 체계 등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최근 지역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화폐 조차도 혁신도시 안에서는 홍성과 예산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통수단 역시 郡지역 경계를 벗어나면 무료 환승이 불가능하고, 겨울철 폭설 시 제설작업마저도 별개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충남도가 나서서 이 같은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조직을 새롭게 꾸린다고 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소유와 관리 문제 등 공공시설물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곧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적 어메니티(amenity) 확보

주변지역의 가축 분뇨가 큰 골칫거리다. 축산악취 민원은 2017년 124건, 2018년 74건, 2019년 84건, 2020년 1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20년 말 기준 내포신도시 반경 5km에는 299개 축산농가에서 돼지, 소 등 약 59만 마리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연간 약 17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축사 이전·휴업을 유도하고,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 등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 충남 새 엔진 '내포 혁신도시'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 충남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 본격화
- 양승조 충남지사, 내포 혁신도시에 대한체육회 이전 제안
-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 충남 내포혁신도시 관문 삼교역 신설해야
- 충남 내포혁신도시 ‘공동관리조직 신설’ 추진
-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개선 집중 추진

〈최근 충남혁신도시 포털뉴스 제목〉

혁신도시사업에 신규 혁신도시 반영

정부의 혁신도시정책이 유연하지 못함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관련한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사업’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485억 원을 투입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추진하지만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는 제외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820억 원을 들여 어린이 특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만 해당된다.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금년 모든 혁신도시에서 착공되지만, 충남은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후속 정책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지정된 대전 및 충남혁신도시 플랜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추가이전

기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이전 공공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공공기관으로 모두 채울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겠으나, 최소한의 도시형성의 초석은 되어야 하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더 채워야만 시장수요도 작동되고 도시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필수적이다. 충남혁신도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과정이자 권리가 된다.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면 혁신도시 사정은 더 나빠졌다. 혁신도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수요가 2018년 이후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소를 다시 옮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혁신도시 순이동자 중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주거와 교통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일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철도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충남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를 철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가 전국 주요거점과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고립되고 말 것이다. 충남혁신도시처럼 배후도시가 없는 도시일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연계망이 중요한데, 그 중에도 철도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큰 과제가 된 상황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전환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철도는 세계적으로 여객이동의 8%, 화물운송의 7%를 차지하지만, 교통 에너지의 2%만을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수단이다.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며, 철도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혁신도시정책 지역 주도성 강화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의 주체적 역할 또한 중요하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도시 추진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중심의 관리체계를 시·도 중심으로 이관하고, 관련 중앙부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 부서로 구성된 지금의 관리체계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 혁신도시발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지사, 군수,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경제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고, 실질적인 영향력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노력을 전개하고, 교육문화 등 높은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변 지역과 혁신도시 간의 이해와 협력,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미완의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서구 선진국의 혁신도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30~40년 오랜 동안에 걸쳐 추진되었다. 우리의 혁신도시시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4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퇴행의 시간을 빼고 나면 어림도 없는 시간이다. 충남혁신도시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느슨하게 할 일도 아니다. 균형발전정책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특집

02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시사점

민성희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전략 평가

1960년 이후 정부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2003.6.12.)’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24.)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시·도별 배치방향 등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에 앞서서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 ‘노·정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각 지자체별로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입지를 확정하였고, 2012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작으로 하여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112개의 지방이전이 2019년 말에 완료되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선정은 3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법정·심의기준 적용)를 거쳐 175개 기관(51%)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170개 기관(49%)은 수도권에 잔류하였다. 이전대상 선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잔류하게 되는 기준 중에 심의기준은 법정기준에 비해 객관성 확보에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한 부분도 있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배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24.)에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되,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배치하였다. 지역파급효과 측면에서 각 기관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배치는 형평성 원칙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배치하는 효율성 원칙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진행된 이전대상 공공기관 배치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

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나, 기관별 가중치 산정 시 동반이전 가능한 연  
관기업의 규모, 지자체의 이전공공기관 활용 및 지원계획 등의 반영이 미흡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효율성 원칙’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특성의 연계가 미흡한 지역이 발생하  
여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감소한 측면도 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고 이전공공기관  
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지선정원칙을 제시하였다(‘혁신도시 입지선정지  
침’('05.7.)).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한 원칙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입지선정위원회의 평  
가를 거쳐 결정하였고,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  
신도시)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시·도지사가 입지를 선정하게 하여 시·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었으나, 입지선정기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 다양한 지역·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혁신도시 대부분이 신  
도시형과 신시가지형 개발 방식으로 건설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였고  
정주여건 성숙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혁신도시 내 인프라 건설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과 자원의 지속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주 만족도 개선이 해결과제로 상존하게 되었다.

〈표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사항

연도	주요 내용
’03.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04.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마련
’05.상반기	국회보고, 노조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05.5.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 체결
’05.6.	‘노정 기본협약’ 체결
’05.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및 발표
’05.12.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06.4.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방향 마련
’07.1.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07.4.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07.12.~’14.12.	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17.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개정('18.3.27.시행)
’18.3.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기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19.12.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이전 완료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혁신도시  
정책성과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혁신도시 내 인구 및 기업성장 효과, 수도권 인구 분  
산 효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 효과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혁신  
도시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0만 4천여 명으로 계획인구(2030년)의 76.4%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20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하였으며, 2012년부터 5년간 일자리 11만여  
개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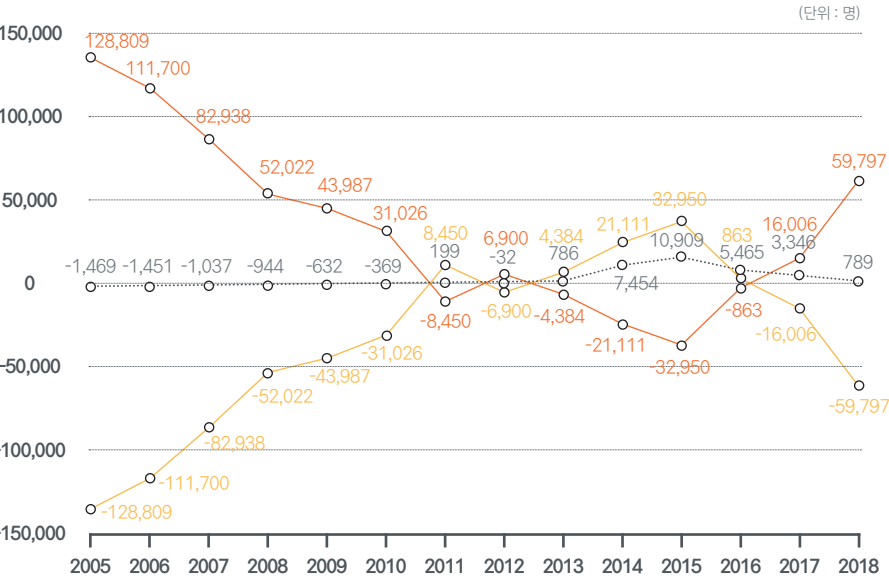
〈표 2〉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 (2019.12.기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계획)	혁신도시 인구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기관수 (이전인원)	인구현황 (명)	계획인구 달성률 (%)	기업유치 (개)	일자리 증가 (명)
부산	13 (3,262)	7,522	107.5	197	18,600
대구	10 (3,162)	17,671	79.5	148	10,048
광주·전남	16 (6,923)	32,478	65.6	391	13,556
울산	9 (3,179)	19,308	95.4	45	8,583
강원	12 (6,118)	23,463	75.6	48	13,128
충북	11 (3,116)	25,937	65.7	55	8,943
전북	12 (5,300)	26,929	93.4	346	21,874
경북	12 (5,561)	21,811	81.6	40	8,444
경남	11 (4,080)	24,849	65.8	434	9,995
제주	6 (703)	4,748	93.1	0	1,696
계	112 (41,364)	204,716	76.4	1,704	114,867

자료 : 국토교통부 | 내부 자료 : 김은란 외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계획인구 달성률’은 평균값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가 완화되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  
심복합도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약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  
던 수도권의 인구 집중 속도가 2010년 기점으로 완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가속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현재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이는 혁  
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이 2015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수도권, 혁신도시의 순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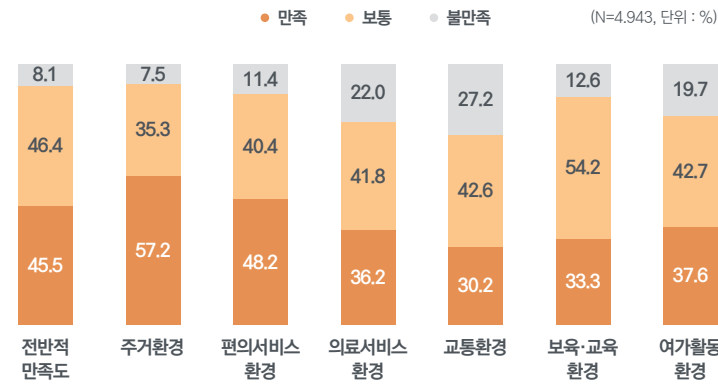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2019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됨으로써 그 효용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구가 수도권보다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되었고, 특히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전문서비스 부분의 지역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신(新)지역성장거점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20년 상반기)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전반적 만족 비율은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환경’은 30.2%로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주여건 영역에서 교통·의료 서비스 환경은 집중개선이 여가활동 및 학교·보육환경은 점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

혁신도시별로 정주여건 중 개선영역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전반의 개선영역과 유사하나 부산, 충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 광주·전남, 강원, 전북, 경남, 제주혁신도시는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우선적 개선요구가 높았고, ‘여가활동’과 ‘학교·보육시설’도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경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우선적 개선요구가 높았고, ‘여가활동’도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혁신도시는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우선적 개선요구가 높았고, ‘학교·보육시설’도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혁신도시는 ‘교통환경’과 ‘여가활동’의 우선적 개선요구가 높았고, ‘학교·보육시설’도 점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한 집중개선이 요구되었고, ‘교통환경’과 ‘여가활동 환경’도 점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도시에 대한  
시사점

첫째,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상+물리적 공간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관사업의 연계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기관 및 혁신도시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



다. 또한, 혁신플랫폼은 학습·교류의 장, 스타트업 및 기성기업의 입주, 거버넌스 지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장을 조성하여 기업가적 혁신생태계로서 혁신도시의 브랜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픈캠퍼스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범용 교육(예 : 코딩교육) 및 창의인재 양성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혁신도시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미분양용지 용도 전환, 장기 미착공용지 착공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인프라 정주환경 개선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도시기능 확충도 필요하다.

둘째,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발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인재 육성, 기업 지원 등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상생발전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 및 사업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도시 개발구역을 넘어선 혁신생태계 조성, 생활권계획 수립, 상생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권 설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서 산·학·연 연계,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기업가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신지역성장 거점 형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되, 정부의 지원 등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 및 역할을 공공기관 이전 재원에서 혁신도시 발전재원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 이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혁신도시 계정 신설, 국세·지방세 이관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 및 혁신도시 발전·상생 재원 기금 조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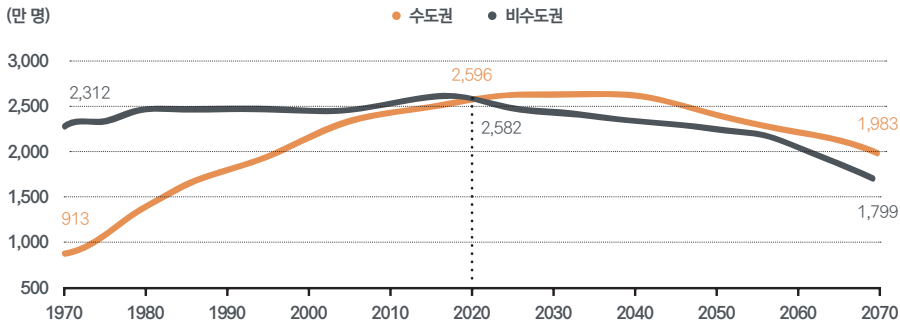
# 03충남혁신도시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오용준 |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충남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협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핵심지대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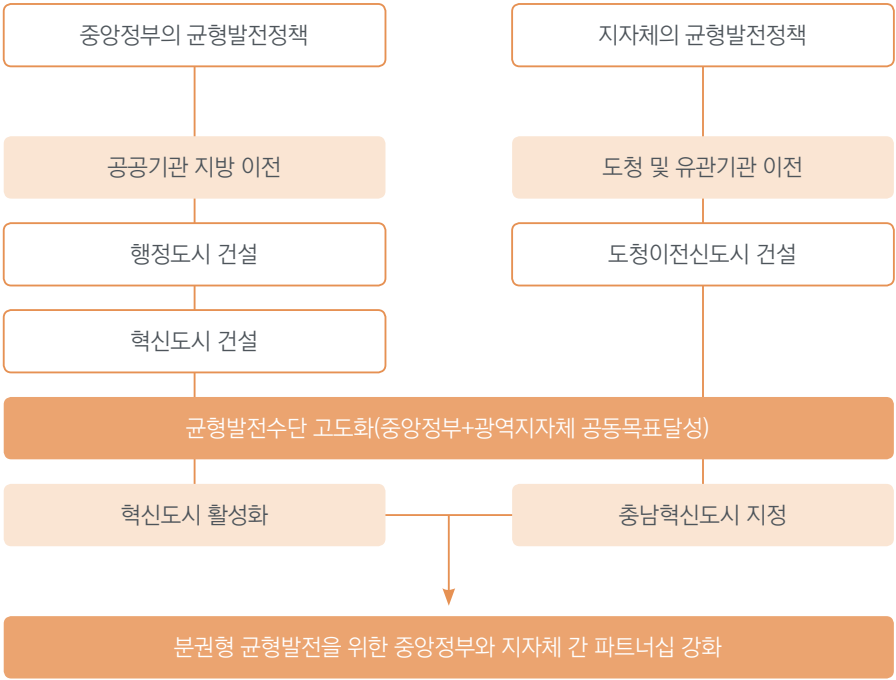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 9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가 발생한 이후 내린 결정이었다. 국토연구원(2020)<sup>1)</sup>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충남혁신도시는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림 1>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년)  
자료 :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1) 국토연구원, 2020,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전략, 국토정책 Brief 제77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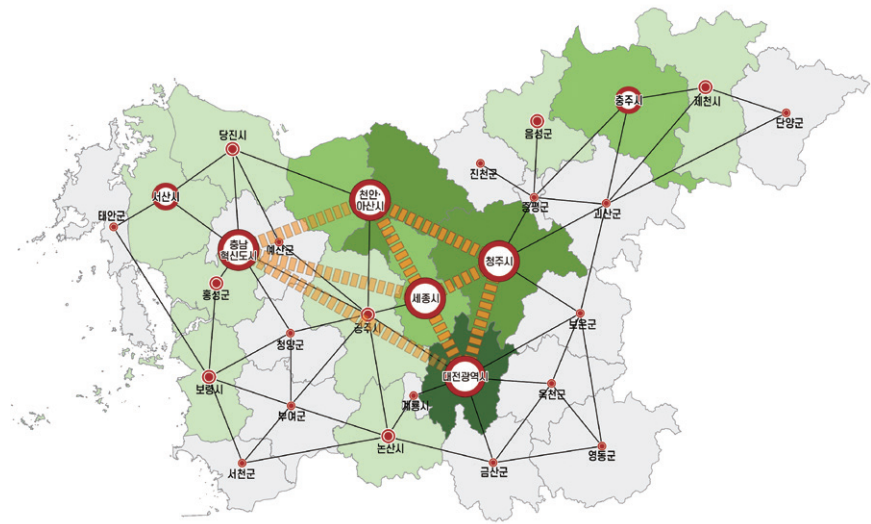
제2의 혁신도시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대 가치를 모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치분권은 ‘자율형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균형발전은 ‘자립형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기존 혁신도시가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진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의 산물이라면, 충남혁신도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충남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충남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에 있던 도청과 유관기관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으로 이전해 조성한 도청이전신도시로 ‘자립형 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는 충청남도의 지리적 인구중심점을 수도권 방향(북진)에서 서해안으로 전환(‘10~‘15년간 1.9km 서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충남혁신도시는 충청권 메가시티(Mega-City Region, MCR)<sup>2)</sup>를 형성하는 서해안권거점도시 역할도 수행한다. 충청권 메가시티(MCR)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이면서 이해관계지역들 간 합의된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자율형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충청권 메가시티(MCR)는 5대 거점도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아산시, 청주시, 충남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가 다이아몬드형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며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는 광역생활경제권을 의미한다.



<그림 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충남혁신도시 | 자료 : 직접 작성

2) 충청권은 인구감소와 분권화, 기술혁신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광역적·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메가시티 (MCR) 정책을 추진 중임





〈그림 3〉충청권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성(안)  
자료 : 오용준 외, 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차별화된 발전테마를 갖춘  
충남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핵심기능군을 설정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규모는 공공단체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내 최대 346개 기관이 입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이전기관과 잔류 기관이 분류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정부가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도(道)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는 형평성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이전규모를 추정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하는 효율성 원칙으로 이전지역을 결정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균형발전지표를 통해 충청남도의 지역발전수준을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로 평가하였다. 충청남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배려가 가능한 지역인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혁신도시의 핵심기능군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관 유치의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충남혁신도시의 주요 유치 기능군으로 환경·연구개발 거점 및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을 위한 환경기술 기능군, 환경해권 주력산업 연구·개발(R&D) 허브 조성을 위한 R&D 기능군,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 기능군 등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 기능군과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남혁신도시의 핵심기능군을 결정해야 한다. 10개 혁신도시가 지역특성화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남혁신도시의 기능군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 1〉 1차 공공기관 이전(119개) 당시 잔류 기준

법정잔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항 1호~7호)	심의잔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항 7호)
①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②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환경관리공단 등) ③ 공연·전시·도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국립민속박물관 등) ④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 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⑤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환경보전협회 등) ⑥ 그 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지역난방공사 등)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 장애가 곤란한 기관 ③ 동북아 경제 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④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⑤ 지방 이전 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⑥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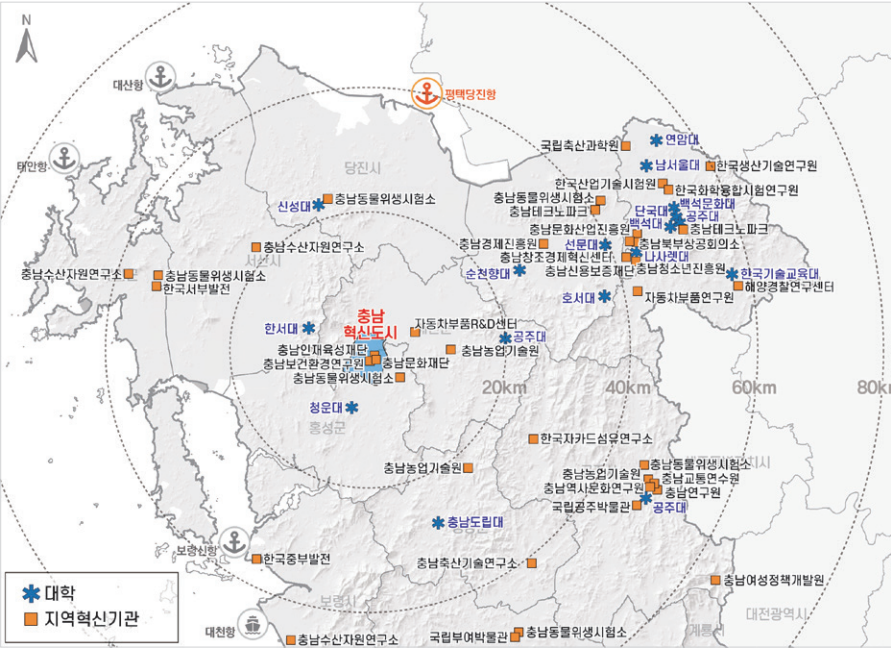


〈그림 4〉 혁신도시별 핵심기능군 | 자료 : 국토교통부, 2018.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균형발전뉴딜의  
핵심지대,  
충남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지대가 되어야 한다.

내포신도시는 지역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수요창출형 도시라 할 수 있는데,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수요창출형 내포신도시의 숙명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충남혁신도시의 성패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 기업이 주변 산학연과 협력해 고용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및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야 한다. 충청남도 주도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민간기업의 연구센터와 산학협력할 수 있는 작동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로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충남혁신도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도시로 조성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충남혁신도시의 기업도시화전략은 혁신도시의 권역단위 자족성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림 5〉 충남혁신도시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 분포 | 자료 : 직접 작성

현안연구

- 01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 연령과 지원금액 검토 연구
- 02 일본 방사능오염 및 오염수 해양 방류 실태





현안연구

01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 연령과 지원금액 검토 연구

김용현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8년 합계출산율이 ‘첫 0명대 진입’ 한 이래 2020년도에도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였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보육관련 정책으로 출산율을 지원해 봐야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부여군에서도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이다.

부여군이 계획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결혼식 비용과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부여군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부여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15곳에 이른다. 실제로 전라남도 영광·장흥·장성·해남군과 나주시, 전라북도 순창·무주·장수·부안군, 경상북도 의성·봉화군 등이고 충청남도에서도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사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고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전남·북 등 호남에서 경남·북, 충남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청년 기본 조례와 연동되는 수혜 연령 및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혼장려 지원금  
수혜 연령 및  
지원 금액 검토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청년 연령 기준 검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청년은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회인으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일컬어 왔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은 충남도에 거주 생활하거나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한다. 논산시를 포함한 충남도 시군의 경우,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고 있다. <표 1>에 서 보는 봐야 같이 같은 충청남도에서도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상에 청년을 일컫는 나이는 상이하다.

<표 1> 충남도 시군 및 타 시도 청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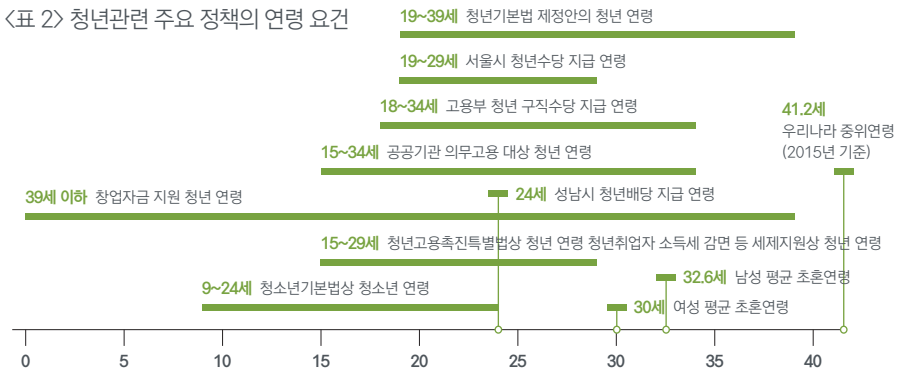
시군	청년나이	시도	청년나이
부여군	18~39세	충남도	18~34세
천안시	18~39세	서울시	-
보령시	18~45세	부산시	18~34세
아산시	18~34세	인천시	19~39세
서산시	18~39세	대구시	19~39세
논산시	18~39세	대전시	19~39세
계룡시	18~34세	광주시	19~39세
당진시	18~39세	강원도	18~34세
금산군	18~34세	충청북도	15~39세
서천군	18~39세	전라북도	18~39세
청양군	18~45세	전라남도	18~39세
홍성군	18~39세	경상북도	15~39세
예산군	-	경상남도	19~34세
태안군	18~39세	제주도	-

자료 : 부여군 내부자료(2020)

충청남도 외에 타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 연령은 아래와 같다.

- (강원)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 18세~49세
- (강원)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 18세~45세
- (경북)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 19세~49세
- (경북)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 19세~49세
- (경남)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19세~55세
- (전남)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 만18세~49세
- (전남)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 만18세~만49세
- (전남)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 19세~49세

〈표 2〉 청년관련 주요 정책의 연령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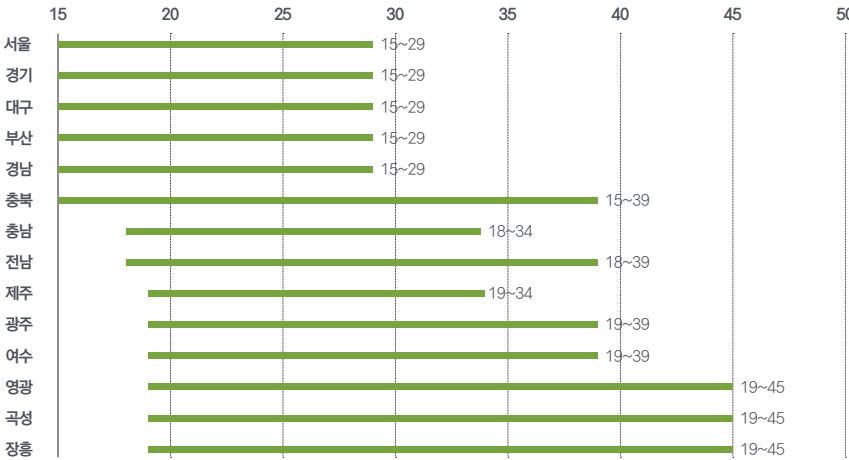
자료 : 정부부처·기관 종합

사회이행기의 지연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 변경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년은 생애주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이행기’에 있다. 취업난에 한참 길어진 이행기가 전개되면서 청년 연령 기준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늦어도 20대에 이행기가 마무리됐었으나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데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역시 청년 나이를 바꾸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41.2세였다. 1990년대까지 20대에 머물렀던 중위연령은 2000년대 이후 30대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청년’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46.5세, 미국과 중국은 각각 37.8세와 36.8세, 인도는 27.3세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실제로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청년의 자격요건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 전라남도의 곡성군과 장흥군은 2016년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청년 나이를 49세까지로 제정하였다. 2015년 기준, 곡성군 인구 3만 672명 중 19~49세는 9,656명(31.5%)으로, 65세 이상 인구 9,862명(32%)보다 적다. 이는 주민등록상 통계라서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간 이들을 빼면 실 거주 청년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군, 곡성군과 사정이 유사한 영암군, 완도군도 청년 연령을 만 19~49세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 자료 : 한겨레 2016. 09. 19 일자,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나라 바깥에서도 청년들의 처지가 열악할수록 연령대를 높게 잡는 추세가 존재한다. 유엔은 최근 획기적인 청년기준을 제시했는데, 1950년 노인기준을 65세로 잡았으나, 최근 산업화의 진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인(Old)을 80세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표 3〉 각종 법령 및 법규의 청년 연령

법령 및 법규	연령의 정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5~29세 이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15~29세 이하
청년기본법(안)	19~34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18~34세 이하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등 충남도 시군조례	18~39세 이하
남해, 영광, 무안군 등 시군조례	만 19~45세 이하
영암, 완도, 함평, 장흥 시군조례	만 19~49세 이하
유엔 연령구분(UN’s New Age Classification)	18~65세 이하

자료 : 2019년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충남연구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지급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혹은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부 중 한 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는 순창군, 고흥군, 옥천군, 영월군, 나주시, 장수군, 성주군 등이다.

타 지자체 사례 이외에 사회분위기상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점차 만혼화 되고 있는 것도 청년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하는 사유가 된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20~24세)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승하던 30대 초반의 혼인율마저 2010년대에 들어서며 정체되는 추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25세~29세)의 혼인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30대 초반의 혼인율은 상승 곡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20대 후반의 혼인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30대 초반의 상승세는 사실상 소멸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낮은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낮아지고, 높은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높은 연령대의 상승세마저 소멸되고 있어 혼인에 대한 적극성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같은 변화가 출생 연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24~35세까지 연령별 혼인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1983년생까지는 혼인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이 발견되지만, 1984년생부터는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보험연구원보고서, 2000)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다름에도 이전 세대와 다른 혼인 성향이 1984년생 이후 남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정 세대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느끼며 다른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행위 양식을 갖는 코호트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이행기의 지연, 국내외적인 연령기준 상향, 만혼화 현상 등으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상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개정한다면 더 많은 관내 신혼부부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검토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만~500만 원이지만 장수군은 1,000만 원이나 된다. 함평군은 총 500만 원을 첫 회 300만 원, 향후 2년간 지원금 100만 원 분할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화동군은 총 500만 원 지원으로, 결혼 첫 해 200만 원, 이어 3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5년간 매년 200만 원 지급으로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부여군은 대부분 지자체처럼 총 지원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되 결혼장려지원금을 수령하고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연간 나누어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하는 두 가지 안(案)을 제안한다.

- 제1안 : 총 지급액 5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150만 원+150만 원+200만 원)
- 제2안 : 총 지급액 500만 원을 5년간 각각 100만 원씩 동일 지급하는 방안
  - 초혼인 경우만 지급하며 부부 개인별로 지급 한다.
  - 부부 중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반액인 250만 원 지급 한다.
  - 부부 중 한 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Ⅰ 참고문헌 Ⅰ

부여군. 2018. 부여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부여군. 2020. '20~' 25 부여군 인구·청년정책 확대 추진 계획(안)

이태열. 2020. 최근 국제혼인 증가의 특징. 보험연구원

충남연구원. 2019. 논산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

경인일보. 2018.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 (8월 30일자)



현안연구

02

일본 방사능오염 및  
오염수 해양 방류 실태

박근오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방만기 |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 및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들어가며

2021년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폭발하고 그 여파로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유출되었으며, 연료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입시킨 물과 오염된 지하수가 배출되면서 오염수가 지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하루 평균 약 140통의 오염수 발생).

육상에 설치된 오염수 처리시설의 용량에 점차 한계를 느끼던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다핵종 제거 설비(ALPS)를 활용하여 걸러낸 오염수에 대해 처리수라는 이름을 사용해가면서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오다가 결국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소위 처리수의 경우 트리튬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먹이사슬의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우려도 관계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동일본대지진을 복구해오는 과정에서 재해 피해상황 및 복구와 관련된 정보의 누락, 소극적인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방사성 물질의 누출 및 실태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보제공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일본이 그동안 어떠한 대응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의 일본 정부 대응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급변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자세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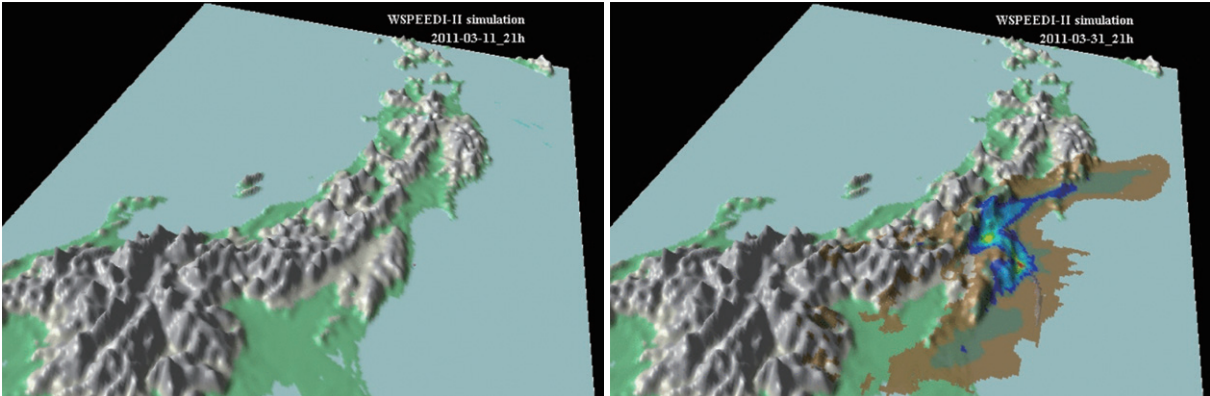
일본의  
방사능오염 실태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및 방사능 확산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수반하여 발생했던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다량의 방사능이 사방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

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육지로, 태평양쪽으로 향하였으며, 고농도의 방사능이 토양과 작물 등에 침착하게 되었다. ‘동일본 토양 베크렐 측정 프로젝트<sup>1)</sup>’ 조사에 따르면,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주구역에 해당하는 세슘농도의 지역도 다수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결코 가볍게 처리할 오염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외부에 유출된 Cs-137(세슘)의 확산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좌측은 사고당일의 모습, 우측은 3월 31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사고 당시 한 달도 안 되어 일본 본토 내부와 태평양 연안의 지역 및 해양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사고발생 후 1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확산범위는 매우 폭넓게 분포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겠다.



<그림 1>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Cs-137(세슘) 광역확산과 대기강하량 시뮬레이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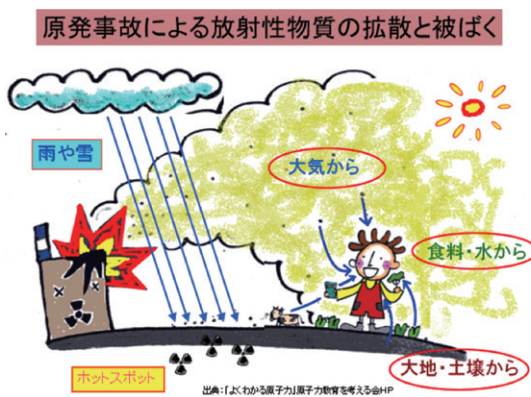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및 피폭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확산되며 기상, 온도, 지형, 습도, 고도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쉽게 확산되었다. 일단 지상에 떨어진 방사능은 비바람과 인위적인 움직임 등으로 인해 현재도 조금씩 침강하거나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산의 원리는 대략 유추가 가능하나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양이 방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쏟아졌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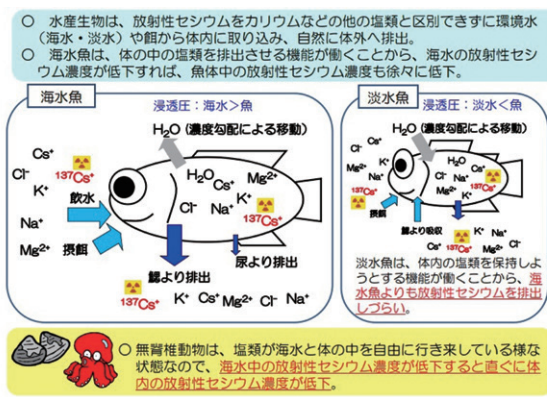
㉠ 산림의 오염

일본은 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현(縣)으로 한정하면 71%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다. 대기 중에 방출되어 지구 표면에 침착된 방사성 세슘의 대부분은 숲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숲에는 방사성 세슘이 장기간 잔류할 가능성이 있고, 외부 피폭에도 기여하고, 임산물의 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 東日本土壌ベクレル測定プロジェクト… 이 프로젝트는 '14.10월~'17. 9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동일본 17개 도현(都県)의 토양을 시민들의 도움으로 채취하여 민간단체인 “모두의 데이터사이트(みんなのデータサイト)”에 참여한 측정실에서 베크렐로 측정된 프로젝트를 의미함



▲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과 피폭과정



▲ 하천 및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

1986년의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는 사고 후 장기간 방사성 세슘이 토양의 표층 5cm까지 머무르고 있었으며, 깊은 곳에서는 좀처럼 이동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방사성 세슘이 토양의 점토 광물에 흡착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흡착되면 그 위치에서 이동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숲의 오염은 목재, 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야생 버섯에서 높은 방사성 세슘이 관측되고 있으며, 원목 재배 버섯 등에서도 식품의 규제치를 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원목 버섯의 세슘 농도는 버섯 생산지가 아닌 ‘원목 생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유출사고 인근지역의 목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고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목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방사성 세슘 등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멧돼지 등의 야생 동물에서도 높은 농도의 방사성 세슘이 보고되고 있는데, 동물의 식성이 방사성 세슘의 농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 사슬의 상단에 있는 야생 동물은 산림 생태계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하천의 오염

해양에 대해서는 오염의 측정에 대해 상세한 규칙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강·하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계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원자력 재해대책본부가 책정한 규칙<sup>2)</sup>에 따라 전년도에 50Bq/kg을 초과한 적이 있는 수산물, 해당 지역의 주요 수산물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의 방사성 물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각 도도부현 및 수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강이 오염되었는지, 오염 수준은 어떤지 등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한편,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비교하면 민물고기의 방사능 오염도가 훨씬 높은 채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의 생태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수산생물은 방사성 세슘을 칼륨 등의 다른 염류와 구별하지 못하고 환경수(해수·담수)나 먹이로부터 체

2) 「検査計画、出荷制限等の品目・区域の設定・解除の考え方(검사계획, 출하제한 등의 품목·구역의 설정·해제의 고려방법)」(헤이세이28년 3월 25일 개정)



내로 취하고 자연스럽게 체외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바닷물고기는 몸 속의 염류를 배출시키는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저하되면, 물고기 체내의 방사성 세슘 농도도 서서히 저하하게 된다. 반면, 민물고기는 체내의 염류를 보존하려는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닷물고기보다도 방사성 세슘을 배출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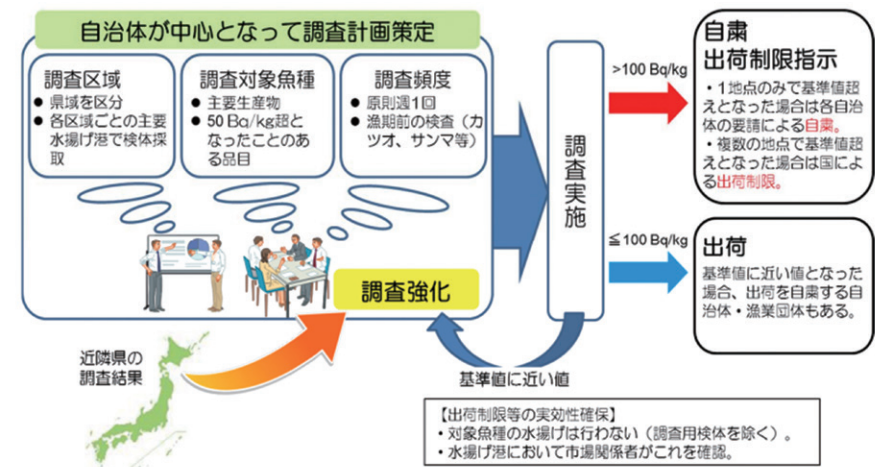
◎ 바다의 오염

바다에서의 방사능 오염은 바닷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파악하기 어렵고,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 시민활동에 있어서도 전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 정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명을 한다. 기본적으로 바다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관할부서는 수산청이며, 2011년 5월경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기본 방침(水産物の放射性物質検査に関する基本方針)」이 발표된 바 있다. 즉, 물고기의 종류를 크게 ‘연안성 어종’과 ‘광역 회유성 어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연안성 어종은 지역을 가나가와현~후쿠시마현 남부, 후쿠시마현 북부 이북의 2곳으로 구분하여 샘플링 조사하였다. 또한, 광역 회유성 어종은 물고기의 종류를 가다랭이, 정어리, 고등어류, 공치, 연어의 남하군으로 분리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3월 10일 일본 과학 미래관에서 열린 ‘Lesson #3.11 프로젝트’ 심포지엄 “원전 사고에서 7년 방사능 오염 상황은 어디까지 개선되었는가”에서 야마다 마사토시<sup>3)</sup>는 “바다로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은 어디로 갔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그에 따르면,

- ① 표층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갔음(북태평양에서 방사성 세슘의 광역 표면 물 관측 결과)
- ② 가라 앉아 남하해 갔음(북태평양에서 방사성 세슘의 내부 순환 과정)
- ③ 입자 상태로 되어 침강해 갔음(입자상 방사성 세슘의 침강 및 수송 과정, 해저 퇴적물의 축적량 및 노화)

이상의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 일본에서의 대응 과정

3) 히로사키대학 피폭의료종합연구소 야마다 마사토시(山田正俊)

원전 사고 1개월 후에는 입자 상태의 방사성 세슘이 2,000km 떨어진 해역의 심해에 도달하고, 4~5년 후인 2015~2016년에는 북미 대륙 서해안에 방사성 세슘이 도달하며, 수심은 800m까지 탐색한 결과 100~200m 깊이까지 침투하여 남하해 갔다고 하였다.

이처럼 바다의 오염은 거리와 깊이 모두에 작용되며, 그 확대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대응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20밀리 시버트 문제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 4월 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 縣内の 학교에 통지를 보내 잠정적 피폭한도를 20mSv로 설정하였다. 즉, 이 통지는 아이들의 피폭 한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ICRP)<sup>4)</sup>에 따르면 긴급상황에서 20~100mSv/년, 사고 수습 후에는 1~20mSv/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참고 수준의 중간치인 20mSv/년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CRP의 권고는 피폭 방호계획의 책정 시 관계자 및 책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장기간 일률적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최초의 잠정치를 기준으로 채용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문부과학성이 연간 실효선량의 피폭한도 기준으로 야외(교정/원정)에서 3.8μSv/h 이하, 실내(목조)에서 1.52μSv/h 이하로 제시하여 있으나, 「제염 등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현장에서 평균 공간 선량률이 2.5μSv/h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기준치가 매우 높은 수치임에도 어린이들의 기준치는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의 제염기준이 0.23μSv/h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들에게 턱없이 높은 수치를 허용치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지역별 제염기준의 차이

현재 일본에서는 주변보다 시간 당 1μSv/h 이상 높은 곳을 제염대상으로 하고 있다<sup>5)</sup>. 즉, 1m 높이에서 주위의 공간선량에 1μSv/h를 더한 값이 제염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주변 공간선량이 0.1μSv/h인 경우에는 1.10μSv/h 미만이면 제염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은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기준치에 대한 제염 대응을 각 지자체에 맡기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되고 있는 곳도 다수이며, 지자체에서 이러한 제염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즉, 일본에서는 방사선 오염도가 높고 제염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라도 일정량의 값을 기준으로 제염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국가가 제시한 기준치와 도쿄도가 제시한 기준치, 혹은 기준치 제시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 현장에서 기준 적용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publication109(비상 피폭 상황에서 공중보호를 위한 조언)

5) 문부과학성 지침



최근 대두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투기<sup>6)</sup>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는 방사능 오염물이 고여 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는 물로 희석하여 태평양에 흘리는 방법을 취하려 하고 있으나, 일본과 국제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도쿄전력은 이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오염된 물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도쿄 전력은 녹은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매일 물을 원자로에 넣고 있으며, 산 중턱에서 바다쪽으로 흐르는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물은 고농도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로 되어 있으며, 매일 계속 모여들고 있어 방사능 오염수는 총 100만 톤을 초과하고 있다. 사실 이 물은 사고로 녹은 연료봉의 조각(파편)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접촉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 물을 “트리튬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에서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며 이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트리튬이란 삼중 수소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트리튬의 에너지는 낮지만 체내에 유입되어 버리면 내부 피폭의 위험이 있다.

또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 2018년 여름에 밝혀졌는데, 세슘, 스트론튬 등 62개 핵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사용하였으나, ‘ALPS’로 처리한 오염수의 약 8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원전 폭발 후 약 10년이 경과한 최근에 들어, ‘ALPS’에서 제거할 수 없는 ‘탄소 14’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탄소 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이며, 대기중으로 방출되면 ‘탄소 14’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에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된다.

탄소는 인체를 포함한 모든 유기물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탄소 14’는 다양한 생물의 신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될 수 있다.

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해양에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하는 걸까?

이 사실은 그린피스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위기 2020<sup>7)</su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까지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진다”, “오염수는 트리튬 물이며, 트리튬은 리스크가 낮다”, “해양 방출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등 해양 방출을 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그동안 말해 온 소위 ‘신화’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러한 ‘신화’는 사실 경제 및 정치적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양 방출은 가장 경제적으로 ‘싼’ 대안 일뿐만 아니라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없어지는 것으로, 폐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원전사고는 이제 끝났다는 이미지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은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물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위협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장기 보관 및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

의 적용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들은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을 검토하는 동안, 육상 보관을 계속하는 것은 반감기가 12.3년의 트리튬 양을 줄일 수도 있다. 오염수의 자연계 방출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철회시키기 위해 그린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앞으로도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가면서 일본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나갈 필요가 있다.

체르노빌 사고에서의 일본 대응<sup>8)</sup>

1993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구)소련정부에 의해 방사성 물질의 동해에서의 해양투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의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주변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이한 이상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본 정부의 방사능 대책본부 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가 상호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며 대응을 해 나갔다. 특히 1993년 4월 5일 및 4월 13일 방사능 대책본부간 회의를 개최한 후, “①러시아 정부에 대해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②과학기술청(현. 문부과학성)에서 (구)소련의 해양투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술적 평가검토를 실시하는 ‘해양 환경 방사능 데이터 평가 검토회’를 설치 운영한다. ③동해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일본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문제에 관한 양국 합동 작업반 설치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동해에서의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1993.8.30.), 1993년 10월 16일 러시아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 900m<sup>3</sup>(1.08Ci, 평균농도 1.28μCi/l)를 투기하였으며, 재차 동해에서의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이후 러시아의 해양 투기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러시아정부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요구와 실질적 조사를 통해 해양투기를 저지하였으며, 결국 공식적인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에도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 해양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 해양 환경 방사능 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사례가 있었다.

시사점

일본은 각종 재해를 자주 겪어오면서 재해·재난 등 방재 측면에서 선진적인 제도와 수단을 적극 활용해온 국가이다. 그 과정에서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벤치마킹을 해왔고, 우리나라의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규모의 대규모 지진일 뿐만 아니라 쓰나미와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및 방사능 누출사고 등 복합적 재난으로 발전한 대표적 재난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재난, 재해를 겪어온 일본도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왔고 특히, 최근의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는 어쩌면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능력 이상의 고난도의 대응기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일본이 겪어보지 못했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처리과

6) <https://www.greenpeace.org/japan/nature/story/2020/11/06/45846/>  
7) [https://www.greenpeace.org/static/planet4-japan-stateless/2020/10/ba82306e-radioactivewater\\_jp\\_fin.pdf](https://www.greenpeace.org/static/planet4-japan-stateless/2020/10/ba82306e-radioactivewater_jp_fin.pdf)

8)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1-02-05-04.html](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1-02-05-04.html)

정에서 그동안 일본이 자랑해오던 주체 간 협의과정, 매뉴얼 등 대응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오픈하지 않으면서 정부 단독의, 혹은 도쿄전력과 정부 간의 제한된 협의를 통해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동안 일본에서 이루어왔던 대응, 복구과정과 상반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다.

공기 중, 토양, 지표 등 지역별 방사능 수치나 하천, 호수 등 수질 상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치와 그동안의 방사능 수치 변화 등 기본적인 데이터의 공개도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지역에의 선부른 복구 장려와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및 섭취 장려 등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후 10년이 지났으며 장기간에 걸쳐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서 겪어보지 못한 재난복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 하에 일상적 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부족하여 재난복구를 위한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는 단기간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후대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들에게도 그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일본 정부 대응 태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일본 정부 대응 태도를 비교해보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주변 국가와의 협의와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속적 협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겠다는 점이며, 차이점이라면 원인 제공을 남이 할 때와 자신이 할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라 하겠다. 재난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해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빠른 해결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열린이슈

#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선언서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신상구 | 충청문화역사연구소 소장

##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의 경과와 역사적 의의

기미년인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는 천안, 진천, 청원, 연기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모여 3단계로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는 항일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단계는 4월 1일 오후 1시 무렵 시작되었다. 조인원은 시장의 군중 앞에서 아우내장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시장 군중들이 따라 크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군중은 '대한 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에 태극기를 달고 이를 앞장세워 거리를 누비며 대한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시장에서 약 50보 정도 떨어진 병천 현병주재소의 코야마(小山) 소장 등 日警 5명은 만세 소리에 놀라 시장으로 출동하여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시위대가 불응하자 즉시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

▼ 포암 이백하 선생이 1978년 충북도청에서 국민훈장 애족장을 받는 모습





두 번째 단계는 오후 4시 경에 일어났다. 사상자들의 친지들이 시신을 헌병 주재소로 옮기고 항의를 하자 김교선, 한동규, 이백하, 이순구 등이 군중 100명과 함께 주재소로 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으며 사망자에 대한 조치와 구급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군중이 점차 늘어나서 1,500명에 이르렀을 때 헌병들이 권총을 발포하여 또 많은 사상자를 냈다. 시위대는 헌병 보조원 맹성호와 정수영에게 동족으로 같은 민족을 죽이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유관순은 주재소장을 잡아 낚아채면서 항의를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군중이 아우내 장터 부근의 산과 시장에 모였다가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고 전화선을 절단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일본 헌병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고, 총검을 휘둘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9명에 달했다.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를 비롯한 7명의 친인척을 잃었다. 김구응 의사와 노모 최정철 열사도 독립만세시위 현장에서 순국했다. 그리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여 명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조인원(趙仁元)·유관순·유중무 각 3년 형, 김용이·조병호 각 2년 6개월 형, 김상훈·백정운(白正云) 각 1년 6개월 형, 조만형·박제석 각 8개월 형, 박봉래 기각, 신씨(申氏) 무죄, 김교선·한동규·이백하·이순구 각 2년 형, 김상철 6개월 형 등의 판결을 언도받았고, 유관순은 부당한 재판 결과를 거부하면서 저항한 끝에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 7년 형을 선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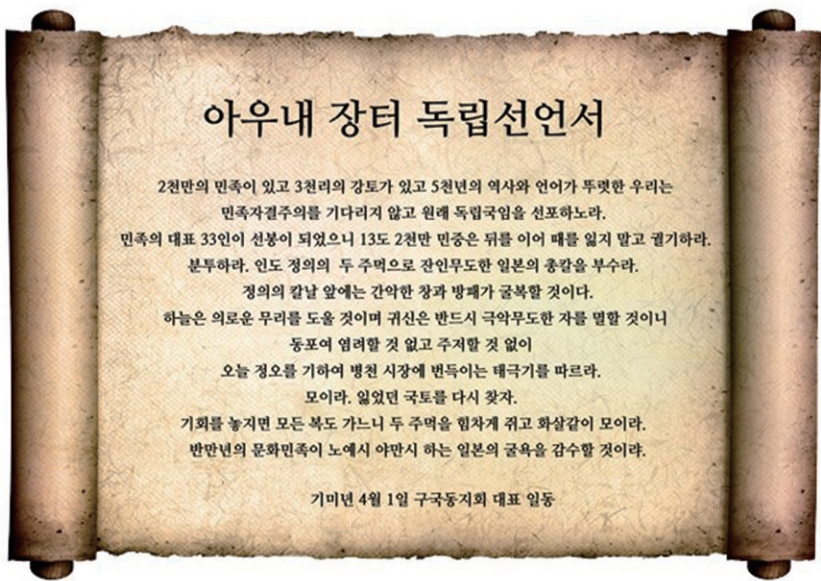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은 호서지방 최대의 항일독립만세운동으로 독립선언서를 지역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백하는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를 구국동지회 명의로 기초했으며, 조인원은 오후 1시경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유중무는 자금을 담당해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기미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선언된 최남선(1890-1957) 선생과 한용운(1879-1944) 선생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너무 길고 한자투성이라 난해하여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포암(逋巖) 이백하(李栢夏, 1899-1985) 선생은 그것을 참고해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 326자로 지역실정에 알맞게 직접 초안하고 미농궤지(美濃靄紙)에 수일간 철야 복사해 배부했다. 그리고 포암 이백하 선생과 절친했던 조인원 선생이 기미년 4월 1일 오후 13시에 아우내 장터에서 낭독했다고 한다.

“2천만의 민족이 있고 3천 리의 강토가 있고 5천 년의 역사와 언어가 뚜렷한 우리는 민족자결주의를 기다리지 않고 원래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로 시작되는 이 독립선언서는 326자에 불과해 짧지만 거사에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 선동적인 언어가 많이 기술되어 있고, 우리 한민족의 굳건한 항일독립의지와 기개가 실감나게 잘 나타나 있어 2021년 조선일보의 말모이 대상이 되었다. 최근 필자가 3.1운동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1년 5월 3일 현재까지 기미년 3.1운동 당시 지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자체 기초해 선언한 것으로 밝혀진 곳은 경상남도의 함안(咸安)과 하동(河東)을 비롯해 3-4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미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선언된 이백하 선생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사상 아주 드문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의 正體性(identity)을 밝히는 데에 아주 중요한 향토 사료로 인식되고 있다.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 찾기  
운동의 필요성

해마다 3.1절이 돌아오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성대하고 엄숙하게 개최되고, 아우내 장터에서 봉화제 행사가 활기차고 엄숙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저 착잡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 15년간 구국동지회 이름으로 기초하고 선언된 아우내 장터 독선선언서 원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원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신문과 방송은 물론 지역문화원과 시민단체,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을 찾기 위해 널리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국가 기록보존소를 직접 방문해 독립선언서 원본과 구국동지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협조해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 절망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실증주의 사학을 신봉하는 강단사학자들이 아직까지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을 찾지 못하고, 천안 구국동지회(救國同志會)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을 무시 내지 부정하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조작 가능성까지 들고 나와 나는 물론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만약 항일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조국에 바쳐가면서까지 이국만리 만주 벌판을 떠돌며 풍찬노숙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열렬히 전개했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가느다란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천안, 병천, 진천지역 3,000여 명의 성년 애국 시민들이 아우내 장터에서 목이 터져라 항일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어디엔가 살아남은 후손들이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미력하지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전국적으로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천안 구국동지회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이다. 그리고 필자가 역사학계에 최초로 제기한 천안역전 3·3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할 각오이다.



##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정신의 창조적 계승 방안

또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조국이 당면한 국가적 난제인 환경오염과 파괴, 노사분규, 양극화, 분단과 통일, 핵문제, 인간소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열과 성을 다해 선진민주 복지국가의 건설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생각이다.

우선 먼저 전국의 열렬한 애국시민들이 기미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 제102주년을 계기로 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 찾기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원본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 그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고 왜곡된 한국 항일독립운동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를 민족의 성전인 독립기념관과 천안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2009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일원에 조성된 ‘아우내 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에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 전문을 새겨 놓은 기념비를 건립해야 한다. 또한 해마다 3월 1일 개최되는 봉화제 때에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기미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벌어진 항일독립만세운동의 경과와 역사적 의의를 철저히 교육시켜 아우내 장터 항일독립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런가 하면 천안 시민들은 물론 충청도민들의 뜻을 모아 포암 이백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지어 망향의 동산·국학원·독립기념관·이동녕 선생 생가·김시민 장군 생가·조병옥 박사 생가·유관순 열사 유적지·홍대용 선생 생가·상록리조트 등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 李殷昌, 항일독립투사 李栢夏翁의 공적서, 1977.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서울 인쇄공업사, 1987.5.26.  
閔丙達·李元杓 편저, 『천안독립운동사』,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5.8.8.  
辛相龜, 「아우내병천(井川) 시장의 유래와 이동 과정 소고」, 충남발전연구원, 『열린충남』 67권, 2014.  
辛相龜, "아우내 장터 만세를 기리자", 동아일보, 2019.3.29일자. A32면  
辛相龜, "아우내 장터 독립선언서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서울일보, 2021.4.2일자. 19면

## 오피니언

# 01

## 야생야사(野生野死)에 죽고 사는 사람들 팀 대폭 개편한 한화 이글스에 기대 걸고 있다



권오덕 | 충남연구원 前이사, 前 대전일보 주필

야생야사(野生野死),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야당에 살고, 야당에 죽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골프에 살고 골프에 죽는다는 얘기인가? 둘 다 틀린다. 정치에 미친 사람으로 늘상 선거 때마다 야당을 찍는 사람도 아니요, 골프마니아를 지칭한 말도 아니다. 야구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야생야사(野生野死)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덕후(德厚)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일본의 오타쿠(御宅)를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 부르는 말인 ‘오덕후’에서 따온 말이다. 그러니까 야생야사는 야구덕후와 비슷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야구에 미친 사람을 부르는 말인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주춤한 상태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나 역시 야구마니아다. 젊은이들처럼 야생야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다. 우리 토레 중에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흔치 않다. 선수 생활은 안 했지만 어릴 적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대학 땀 선수로 출전도 했다. 나이 들면서 이제는 플레이보다는 관전하는 것, TV중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1960년대 초 학창시절 미군방송(AFKN)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를 즐겼다.







미키 맨틀과 로저 메리스의 홈런 경쟁이라든가, 뉴욕양키즈의 명포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명언도 그때 들어 알았다. 또 거포 레지 잭슨과 마크 맥과이어 등의 홈런도 AFKN을 통해 익히 기억하고 있다.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 한국의 고교야구와 실업야구도 마음껏 즐겼다. 박현식, 김응용, 박영길의 홈런에 열광했고 명문 고교야구 열전도 재미있게 봤다.

그러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40년간 야생야사하고 있다. 나는 프로야구 태동 시부터 담 당기자로 수많은 경기를 취재하며 야구의 진미를 알게 됐다. 그 당시 OB베어스가 대전연고였고 코 리안 시리즈에서 명문 삼성을 꺾고 초대챔피언에 오름을 목격했다. 나는 취재현장에서 우승의 감격 을 맞보았다. 연고지 지역신문의 기자이기에 앞서 지역 팬이자 시민이었던 것이다. 몇 해 뒤 OB가 서울로 떠나고 85년 빙그레(現 한화) 이글스가 창단할 때 나는 체육부장으로 역시 야 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야구 덕후로서의 기질을 유지하며 끝없는 야구 사랑을 이어 갔다. 요즘도 한화 이글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비록 야구장에는 못 가더라도 중계방송은 빠짐 없이 본다. 못 보면 스포츠뉴스라도 보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승패를 확인한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케이블TV에서 하는 하이라이트를 꼭 챙겨 본다. 홈팀 한화 경기뿐 아니라 다 른 경기들도 살펴본다. 때론 한화가 대패하는 경기까지 살펴보고, 심지어는 다른 팀의 경기와 선수 활약상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 일일이 찾아본다. 야구경기는 단체경기이면서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른 스포츠에서 맛 볼 수 없는 요소들이다. 류현진의 美 MLB진출 후 최근 10년간 한화는 계속 꼴찌를 맴돌았다. 김응용, 김성근, 한대화 등 최 고의 명장들과 이용규, 정근우, 송은범 등 수많은 FA를 영입하고도 8-10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에도 보살 팬들은 한화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이에 답하듯 올 들어 한화는 대폭적인 선수단 체질개 선에 나섰다. 미국프로야구출신 코칭스태프를 영입하고 노장들을 대거 방출했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비롯한 4명의 코칭스태프가 모두 MLB출신. 구단은 김태균 등 노장들을 대 폭 정리하고 젊은 선수들을 대거 주전으로 발탁했다. 선수들 평균연령이 1위에서 10위로 크게 낮아

졌다. 선수들의 의욕이 넘쳐 선수단 분위기가 크게 향상됐다. 지난 3월의 시범경기에서 뜻밖의 1위 를 차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예상외로 뛰어났던 것. 그러나 개막하자 계속 하위권에 처져 있다. 나는 팬들의 성급한 기대와 선수단에 대한 지나친 기대 를 경계한다.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다고 금방 성적이 좋아질 리는 없다. 전문가들은 한화를 금년에 가장 강력한(?) 꼴찌 후보로 꼽고 있다. 가장 약한 전력을 지녔기 때문. 나도 이에 동의한다. 다만 신 임 수베로 감독의 혁신적인 팀 운영과 젊은 유망주 위주의 팀 리빌딩(Team Rebuilding)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는 수베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의 팀 운영과 지도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선 극단적 인 수비 시프트는 현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단정한긴 이르나 자리를 잡는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제가 됐던 야수의 투수 등판도 메이저리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투수진이 부족한 한 화로서는 가끔 시도할만하다. 한 베이스씩 더 가는 과감한 베이스 러닝도 긍정적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도 방식도 바람직하다. 다만 메이저리그 방식을 어떻게 한화에 맞게 접목 시켜야 하는가가 숙제다. 공격과 수비를 끝내고 선수에게 다가가 자주 대화와 소통으로 선수들의 공 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은 아주 훌륭하다. 워싱턴 타격코치와 로사도 투수코치도 믿을만하다. 이들 코 치들은 다저스에서 투수 켄리 젠슨과 코리 시거, 크리스 데이비스 등을 발굴한바 있다. 최소한 1-2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 10여 년 간 물 방망이로 전락했던 타선의 부활 은 장기적인 기다림이 필요할 듯하다. 과거 장타력으로 위명을 떨쳤던 다이내마이트 타선의 부활을



위해 훌륭한 재목이 나와야 한다. 다행히 노시환의 일취월장은 기대할만하다. 5월 3일 현재 6개의 홈런과 28개의 타점(1위)은 제2의 김태균을 기대하게 만든다. 3루 수비도 출중하다. 4월 30일 하주석이 롯데와의 1차전에서 5타수 5안타, 6타점, 5월 1일 2차전에서 만루 홈런으로 승리에 기여하고 부진을 떨쳐낸 것은 ‘하의 시대가 왔음’을 만 천하에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비도 뛰어나 국가대표유격수로서 손색이 없다. 문제는 盧와 河를 받쳐줄 거포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용병 4번 타자 라이언 힐리와 노장 이성열의 장타가 터져야 다이내마이트 타선이 부활된다. 나는 한화가 잘해야 올해 8-9위 선이고, 설령 꼴찌를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올해 쓸 만한 FA 한 명 데려 오지 못한 데다 김태균, 송광민, 이용규 등 주력들을 대거 내 보내 전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올 한 해는 수베로 감독의 팀 리빌딩을 지켜보고 1-2년 뒤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나는 내 후년쯤이면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것이고, 3년 내로 정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어찌됐든 나는 한화의 영원한 팬을 자처한다. 어딜 가나 한화 성적에 관심을 쏟는다. 한화가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언짢다. 그러면서도 승패에 연연해 무조건 이기길 바라진 않는다. 선수단이 최선을 다하고도 아쉽게 진다면 이는 수긍한다. 그러나 더티 플레이나 무성의한 플레이를 보인다면 참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나 파인 플레이에는 승패를 떠나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오피니언

# 02충남에 살면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기

김갑수 | 굿모닝충청 충남본부장

누구에게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표, 인생철학 등이 모두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경험, 학습 또는 종교적인 신념 등을 통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새 知天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사고의 틀 또한 점점 좁혀져, 좋은 말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반대로는 ‘꼰대’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충남연구원이 마련한 ‘펜데믹시대 희망을 말한다’ 시리즈는 이미 고착화 된 세계관에 적지 않은 균열 지점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가장 큰 도전은 복지에 대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우리는 항상 생존경쟁에 내몰려야 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는 낙오자가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는 “청년에게 자유와 안정을 제공해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적으로 혁신과 포용이 증가할 것이다. ‘나’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흥식 교수는 “핀란드 청년들은 기후 위기와 세계평화를 걱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이런 사회 구조가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전문가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국가 또는 정부와 같은 공공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야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져 새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거란 얘기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실감하게 만드는 시간도 있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물의 서식지가 바뀌다보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이동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의 위기가 이제는 우리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었다.

물론 게놈 혁명이나 인공지능(AI) 등의 주제는 정치학도인 필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주제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릴 적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래된 미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활 영역과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범지구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해외리포트

#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중국

박경철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본 글은 필자가 2018년 7월 중국 구이저우(貴州)省 생태문명 구이양(貴陽)국제포럼의 참석과 2018년 11월, 2019년 11월 두 차례 중국 광둥(廣東)省, 푸젠(福建)省 등 남부지역의 친환경농업과 생태문명 건설 현장을 견학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중국 농촌현장의 견학 내용은 많지만 여기에서는 주요 현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지명과 이름은 편의상 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을 병행해 사용했다.

## 상상 이상의 포럼, 중국 구이저우(貴州)省 생태문명 구이양(貴陽) 국제포럼

2018년 7월 중국 구이저우성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생태문명 구이양국제포럼(이하 포럼)에 참석했다. 참가 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진행되는 일개 포럼이겠거니 생각하고 참가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 학술포럼의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그 규모와 내용이 엄청났다. 7월 7일 10시에 열린 개회식에는 각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일들이 많은데 생태문명 구이양국제포럼이 그러한 경우였다. 10년 전 구이저우성에 서 시작한 이 포럼을 5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면서 그 규모를 키웠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포럼 개회식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안토니오 구테레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의 축전이 있었다. 순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가 시 주석의 축사를 대독했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줬다.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전 대통령, 일본의 하토야마 전 수상, 구이저우성 당서기, 장시(江西)성 당서기, 그 외 열 명도 넘는 국가 정상급 인사와 중국 지방정부 수장의 축사가 있었는데 축사만 2시간을 넘길 정도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10회를 맞는 국가급 포럼이라서 그런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구이저우성의 각급 정부가 총동원되어 행사를 준비했다. 당이 앞서고 정부는 따라가는 중국의 일사불란한 지도체계, 중국공산당의 힘을 절감하는 행사였다. 포럼에는 중국 내외 수많은 학자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의 생태환경, 농촌개발, 농촌사회, 빈곤문제 관련



▲ 생태문명 귀양국제포럼 대회장



▲ 레덤 전 벨기에 수상 축하

유수 학자들이 모여 주로 농촌지역의 환경, 생태, 문화, 빈곤, 개발에 관해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가 저장(浙江)성 당서기로 재임했던 시절인 2005년 8월에 처음으로 그의 생태문명 사상을 대표하는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 즉 ‘양산(兩山)’ 사상을 제기했다. 그는 저장성 안지(安吉)현 텐황핑(天荒坪)진 위(余)촌 방문 시 열린 좌담회에서 한 촌간부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광산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해 경관도 아름답고,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사람들도 화합하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과거에는 녹수청산과 금산은산은 별개로 생각했으나 사실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금은보화)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생태문명 건설과 빈곤퇴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의지였다. 지난 제19차 공산당인민대표회의에서 생태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헌법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고 빈곤문제를 해결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이저우성  
싱이(興義)시  
완펑린(萬峰林)관광구  
위룽(魚龍)촌  
생태습지시범지**

싱이시 완펑린관광구는 ‘만 개의 봉우리’가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며 구이저우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이다. 완펑린관광구 안에 위치한 위룽촌은 총 286가구 6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싱이시는 시진핑 주석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 이념에 따라 이 관광구에 있는 위룽촌 등 8개 마을에 농촌환경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생태정화습지 시범지를 조성해 생태환경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위룽촌 오수생태정화습지시범지의 습지 면적은 600평방미터이지만 이 마을 면적 2,570평방미터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다. 생태습지에는 부레옥잠 등 다양한 수생정화식물이 식재되어 있어 마을에서 배출한 오수가 이곳으로 들어와 정화되어 다시 농경지와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다. 완펑린관광구 내 조성된 생태습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생태와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시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저우(廣州)시  
선농농장(神農田園)**

선농농장은 화난농업대학(華南農業大學) 석사과정을 졸업한 리웨이펑(李衛鵬)과 그의 同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3년에 개설한 농장이다. 대학에서 채소 육종 특히 고추 육종을 전공한 그는 동학들과 제대로 된 유기농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 농장을 개설한 것이다. 리웨이펑이 농장을 개설한



▲ 회사를 소개하는 리웨이펑 대표



▲ 정돈된 유기농 농장

계기는 광둥성의 식품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광둥성에서는 쌀의 중금속 오염문제가 터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선농농장은 소비자 회원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꾸러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회원은 400명으로 1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배송을 받는다. 채소는 안정적으로 배송을 받으며 계란과 돼지고기 등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농산물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매번 주문 시 6개의 물품을 선정한다.

리웨이펑은 소비자 회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일 매일 인터넷에 농사정보를 공개하는데 회원들이 원하는 정보는 회원 정보만 빼고 모두 공개한다. 농장에서는 약 20가지의 채소, 쌀, 계란,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는데 직접 생산한 농산물만 판매한다. 중국의 대도시 인근에는 이처럼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시설지원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선농농장은 경축순환의 농업시스템을 구축해 생태농업과 생태축산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농업국에서도 이 농장을 농산물 안전 샘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농민들이 무료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선천시(深川市)  
우통다오(梧桐島)**

선천시 우통다오는 선전공항 근처에 있으며 24개 건물로 이뤄진 부동산 개발 단지이다. 이 안에는 2동의 호텔과 22개의 오피스 건물이 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일반 부동산 개발 단지와는 전혀 다르게 자연주의풍의 생태순환적인 기법으로 단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조경방식을 통해 식물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도록 했고, 옥상에는 퍼머컬처 등의 방식으로 유기농업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 외벽은 담쟁이넙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고 건물 안은 모두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장식을 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통다오 단지 안에는 24개의 건물이 있는데 각 건물에는 24절기 이름이 붙여있다. 이 단지의 부동산 개발업자는 발도르프 교육을 접하고 오동도와 같이 자연과 생태, 그리고 농업을 결합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 이 단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주말에 파머스마켓도 열리고 있다고 한다.

우통다오는 도시에서 농업과 생태를 실현하는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도시농업을 뛰어넘어 건축과 농업을 결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를 우통다오는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통다오는 도시에서 건축과 농업, 그리고 생태순환과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입추 : 24절기로 지어진 건물동 이름

맺으며

중국을 후진타오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중공중앙1호문건<sup>1)</sup>을 삼농(농업·농촌·농민)문제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삼농문제는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도 가장 핵심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삼농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중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삼농정책의 방향은 다소 전환되었다. 즉, 삼농을 기반으로 생태문명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생태문명 건설은 삼농문제를 넘어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간과했던 환경생태의 문제가 이제는 중국의 성장과 생존을 가로막는 절체절명의 장애물로 인식되면서 생태환경과 경제발전이 선순환되는 공존과 상생의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대국이기는 하지만 개도국 수준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생태문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빠르게 느끼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의 의식 개선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생태문명에 대한 시진핑의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경제, 환경, 농업 정책에서 특히 강화되고 있다. 2018년 정부부처 가운데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환경부를 생태환경부로 개편한 것은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생태환경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지 오래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의심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촌진흥과 생태문명 건설로 나가려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는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중국 공산당과 정부기관이 당해 연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시하는 문건



인권 A to Z

#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이종걸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5~6월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업무 중 하나가 인터뷰 요청이다. 여러모로 바쁠 때라 문의 오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보게 되고 좀 더 성의 있는 인터뷰에 응하게 된다. 그런데 인터뷰 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성소수자 인권이 좀 나아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질문의 의도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속으로는 한숨부터 나온다. 변화하고는 있지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더 토론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글쎄요’ 로 시작하며 먼 산 보듯 자세를 취하다 질문자의 의도에 조금은 부응하는 답변을 한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의 삶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인지, 퀴어들의 삶은 ‘정말’ 존중 받고 있는지, 조금씩 ‘정말’ 나아지고 있는지 에 대해 진지하게 이제는 서로 좀 토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터뷰야 결국 답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지만, 이러한 질문을 인터뷰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성소수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평가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본다. 정말 궁금하다면 함께 책임 있게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즘이다. 이 지면이 그러한 토론의 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으로 성소수자의 삶이 존중받고 있는지, 인권의 현실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소수자의 삶을  
접할 수 있는 경로는  
확대되고 있는가?

1994년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고, 인권을 말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지 20여년이 지났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존재하고, 홍석천, 하리수 등 연예·방송계에서 스스로를 밝히며 활동해온 역사가 20년째다. 언론 매체와 방송 기획 등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주류 언론 매체만이 아니라 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삶은 드러나고 있다. 2000년부터 진행된 퀴어문화축제는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인천, 경남 등의 지역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거리로 나오는 자리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그 기회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사회적 커밍아웃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지인, 친구, 직장동료,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음악, 미술, 문학, 영화,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통해 대중은 성소수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제는 성소수자 당사자나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 연구자들, 종교인들, 법률가들, 상담사들, 의료인들, 성소수자의 부모, 몇몇 기업 및 자영업자 등 성소수자와 직접 만나면서 성소수자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성소수자의 삶은 외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작업들은 민간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지지 성명 및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로 직접 성소수자들과 소통하고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성소수자들의 삶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 개신교측 온라인 매체나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극우 세력들의 매체들이 2015년 이후로 점점 확장되고 있다. 2018년 9월 한겨레의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탐사보도를 통해 동성애와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개신교 종교단체임이 드러났다. 최근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일부 유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나 극우 세력들의 매체는 여러모로 사회적 해악이자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보도물, 교양물, 드라마 등이 이전 보다 확대되었고, 1인 미디어의 확장 속에서 성소수자 관련한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일부 혐오 조장 세력 등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콘텐츠들도 양산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이 있는 국가와 주요 언론 매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그릴 것인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세력들에게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현주소는?

성소수자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며 삶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며, 왜 평범하게 살지 않느냐며 커밍아웃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따돌림, 배제, 괴롭힘,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해야만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 사례를 이야기 해보자. 2020년 5월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40여 개 매체에서 이 보도를 이어갔다. 당시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이 ‘게이’클럽이라는 명명이 오히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야기했고, 인권 침해적이라며 비판했다. SNS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게이 클럽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당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선별 진료소에 검진하는 것이 동성애자로 인식되게 만든 당시 상황으로 인해 검진을 받을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는 하루 50여 차례 전화 상담이 이어졌다. 보도된 확진자는 직장명과 동선이 노출되어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이어졌다. 또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은 직장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에서 주로 호소했다. 회사 내에 자신이 클럽 방문자라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낙인만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발생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의 여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은 살아서 버텨야 잊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올해 3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 육군본부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전역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휴가 기간을 통해 수술을 받았고, 자대 생활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었던 상황에서 육군 본부는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구속력 없는 규칙으로 인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을 처분했다.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한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대한 육군본부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위’)라는 변경된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공동대위는 행정소송을 유가족이 승계하도록 변경 신청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3월 한 달 다양한 현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추모행동이 이어졌다. 이 추모행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애도의 물결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소수자들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차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어 말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차별의 문제가 드러난다.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따돌림, 비난과 조롱, 괴롭힘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바로 차별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과 기획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명시된 원칙들, 보편적 인권의 원칙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소수자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평등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자는 것이 주요한 요구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고 어떤 부분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성소수자 관련 법제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소수자의 삶이 개선된 나라들이 40여 년 전부터 존재했다. 대만은 2019년부터 동성혼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몇 년째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작년 5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독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를 갖고 있지 않다. 변화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성소수자 차별에는 분명한 반대를 나타내면서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읽힌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같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나 법률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유엔과 국제인권규범이 공히 인정하는 성소수자 권리 자체를 합의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를 이끌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2007년 실제 법안 공개를 통해 10여 년째 이

야기 되었고, 17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7차례 발의가 진행되었던 법이다. 국제 유엔인권기구에 서도 10여 차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제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못하다. 그 사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장애인 혐오, 이주민 혐오, 난민 혐오 등으로 인해 차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국가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했던 결과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권의 원칙을 지키자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은 개선되고 있나? 이 질문의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이를 위해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국가와 정치권의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이기에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1대 국회가 작년 5월 말 개원 이후 6월 29일 7년 만에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을 국회에 의견표명 했다. 이제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더 불어 민주당의 평등법안 발의도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시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처럼 비겁한 변명이 없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과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실천 과제는 보편타당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 본 글은 충남연구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NEWS 열린충남 SUMMER VOL.93  
연구원 소식

01 충남연구원,  
올해 전략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 가져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올해 2021년 전략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를 실시하며 양질의 연구 수행을 위한 닳을 올렸다.

5월 4일까지 열린 이번 착수연구심의회 대상 전략연구과제는 연구단과제 4건, 중형과제 1건, 핵심과제 16건 등 총 21건이고, 참여하는 심의위원만 약 130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올해 착수연구심의회는 각 과제별 연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의 참석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올바른 연구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전략연구과제는 충남도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우리 연구원의 핵심연구”라며 “우수한 연구 성과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 급변하는 충남도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연구원, 전략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 모습

# NEWS

열린충남 SUMMER VOL.93  
연구원 소식

## 02 충남연구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 심포지엄’ 개최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4월 29일 연구원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왜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와 관련하여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박사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방출에 따른 우리나라 해역의 영향”을, 원자력안전 과미래의 이정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과 대책”을,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유재영 소장이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관련 충남도 해양 환경·수산 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윤종주 박사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른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오염수의 방사능을 제거해 방류한다 해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없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충남연구원이 개최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긴급 심포지엄

그러면서 “만약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면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1년이 지나면 해류를 타고 동해로의 유입이 먼저 예상되고,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먹이사슬을 통한 수산물 체내 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서해안은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유입 차단으로 그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제 해양환경 보전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고, 1~2년의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정밀한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과 이동예측 모델링 연구가 관건”이라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해수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양 방사능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및 객관적인 안정성 검증 정보 요청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현 위원장, 충남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 보령시 한상범 해양수산관광국장이 오염수 방출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안장현 기획경제위원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충남도 차원에서도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방사능 영향 분석을 철저히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도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령시 한상범 해양수산관광국장은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어민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선제적인 수산물 정책 대안을 가장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충남은 해안선이 총 1,242km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길고, 천혜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은 우리 도민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남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서해안 연접 시·군 관계자 등도 자리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 NEWS

열린충남 SUMMER VOL.93  
연구원 소식

## 03 충남연구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서산의료원이 주관하는 도내 공공기관 교육 릴레이 챌린지 동참

충남연구원(원장 윤환)은 5월 12일 연구원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서산의료원이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챌린지’의 일환으로써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국제자격증 (BLS Provider) 취득까지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총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심장 정지 환자와 기도폐쇄 등의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처치와 가슴압박, 자동제세 동기 작동 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었다. 소정의 평가를 통해 국제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환 충남연구원장은 “나 하나로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해준 서산의료원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교육이 충남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어 조금이나마 보건의료의 인적·지역적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다음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챌린지 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원장 차창모)을 지목했다.



▲ 충남연구원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챌린지 (기념사진)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의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요

사진 이민우  
@아이유-‘여름밤의 꿈’ 중에서